

대형공공기관 충청권이전 배제 보도에 따른 건의안

의안 번호	585
----------	-----

발의일시: 2005. 5. 16
발의자: 김원석 의원 외 인

1. 주 문

「충청권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때문에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해 대형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배제」 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형 공공기관의 충청권이전 철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오랜 낙후지역인 충주시에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가. 2004년 8월 30일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성경룡 위원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충북 배제가 철회된 내용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믿고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
-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북부권 등 중부내륙 지역과 생활권역이 전혀 다른 충남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또다시 대형 공공기관의 충북 북부권의 배제는 불합리한 정책임
- 다. 진정한 국토균형 발전을 통하여 낙후 지역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정치적 잣대가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안목에서 결정 되어야 함
- 라. 충주는 반세기 동안 국가의 국토불균형 개발로 인해 소외되고 공군비행장·충주댐 등 국가 안보와 수도권 지역을 위하여 각종 개발 제한과 규제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음
- 마. 국가의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오랜 낙후 지역인 충주에 대형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줄 것을 건의함.

3.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4. 붙임 : 대형 공공기관 충청권이전 배제 보도에 따른 건의문

대형 공공기관 충청권이전 배제 보도에 따른
건 의 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구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충주시 의회는 21만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시된 지방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논리는 이젠 국가백년 대계로써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토대로
충남 공주·연기지역으로 행정도시가 결정되는 등 대통령님의
국가경영의 큰 뜻이 가시적으로 실현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헌법소원 등 적지 않은 갈등의 골을 만들기도 하였고
아직도 힘든 산고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충청권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때문에 대형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5. 13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접하고 우리 21만 충주 시민은 다시금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

지난해 8월 30일 우리 충주시민들은 성경릉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로부터 “충북 배제를 철회한다”는 정부의 공식발표를 믿고 지난 반세기 동안 국토불균형 정책으로 인해 소외되어온 충북북부지역이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북부권 등 중부내륙지역과는 생활권역이 전혀 다른 충남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된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충북북부권을 배제한다는 것은 우리 21만 충주시민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참여정부에서 추구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원대한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또한 진정한 국토균형 발전을 통하여 낙후 지역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정치적 잣대가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긴 안목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충주는 지난 반세기부터 국가의 국토불균형 개발 정책으로 인해 소외되고 더욱이 공군비행장, 충주댐 등 국가안보와 수도권 지역으로 인한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동안 국가로부터 희생과 불이익이 강요되어 내륙의 외로운 섬으로 전락한 충북북부권의 충주가 이번 대형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선정되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21만 충주시민의 간절한 바램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5. 5. 16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